

비정규직법 .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국민행동 돌입 선언 기자회견 보도자료**

1. 기자회견 내용

**비정규·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강탈,
약자에게만 흑독한 노동정책 당장 중단하라!**

- 일시 : 2009년 3월 11일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비정규법.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범국민행동(준)**
참가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다함께, 진보신당,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국여성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국대학생총연합, 카톨릭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네티즌카페“동행“, 촛불시민 연석회의
참관단체 : 민주언론 시민연합,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 기자회견 참석

2.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유순(민주노총 비정규 선임국장)

- 기자회견 취지 설명과 모두 발언 :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의원

- 법 개악에 반대하는 이유를 당사자에게 듣는다.
 - 발언 1. 50-60대 여성 노동자 : 최저임금법 개악 규탄(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 발언 2. 청년 실업자 또는 대학생 : 청년실업해결 1만인 선언 대표

- MB 정부 규탄발언
 - 민주노총 : 최종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위원
 - 한국진보연대 : 전국여성연대 대표
 - 촛불시민연석회의 :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실련 :

문의 : 박유순 민주노총 비정규선임국장(010-8740-2299)
김정동 민주노동당 노동국장(018-542-5011)
이동주 한국진보연대 민생국장(101-2203-8293)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국민행동 돌입 선언 기자회견문

비정규·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강탈,
약자에게만 혹독한 노동정책 당장 중단하라!

비정규직법 개악반대! 최저임금 삭감 반대! 부자감세(91조원) 철회! 정부와 재벌은 경제위기 고통분담에 나서라!

경제위기로 노동자 서민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책임지고, 대책을 내놔야 할 정부는 노동자 서민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벼랑 밑으로 밀어내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들과 서민, 그중에서도 가장 생활이 어려운 저임금 빈곤층들을 착취해 위기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와 자본의 파렴치함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는 일상적으로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일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의 채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 업종까지 대폭 늘리기 위한 비정규직법 개악을 정부입법으로 기어이 강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올해 7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현행 비정규직법이 확대 적용 될 경우 1백만 명 가까운 비정규노동자가 대량해고 될 것이라는 허위주장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저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마저 깎아 60세 이상 노령 노동자와 외국인, 여성, 청년 노동자들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려 합니다. 반면 부자감세로 인해 4년간 91.7조를 챙긴 부자들의 주머니는 더욱 두둑해질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는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실업 나누기’에 다름 아닙니다. 대졸초임과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것은 전광석화였지만 만들겠다는 고용은 말뿐이었습니다. 생색내기 위해 내놓은 일자리는 고작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인턴 비정규직’일 뿐이고, 이조차 퇴직금지급 의무기한을 피하려고 10개월로 채용기간을 한정했고, 임금도 최저임금 미만이 태반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좋은 일자리는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공기업에서만 1만 9천명, 공무원 포함 전체 공공부문에서 최소 16만 명 이상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민간부분에서도 역시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가 예고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안없이 수수방관할 뿐입니다.

우리는 실업해소라는 책임을 뺏개치고 실업을 오히려 일자리 파괴와 저임금 강요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정부에 반대합니다. 늘려야 할 것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대한 세금입니다. 그렇잖아도 빈궁한 서민들 주머니를 터는 정책은 중단하고, 낭비되고 있는 각종 세금과 재벌의 잉여금을 환수해서 서민을 지원해야 합니다. 한 키에 돈이 쌓여 있는데 정부는 왜 비정규직 노동자와 서민들의 주머니만 털려고 하는 겁니까. 4년간 91.7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정비 사업비 14조와 재벌 사내유보금 등에서 114조만 동원해도 비정규직 2백만 명을 정규직화 하고, 25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와 재벌은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경제위기 고통전담’ 강요를 당장 중단하고,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재정지원을 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실업급여의 지급대상과 금액도 대폭 올려야 합니다. 우리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범국민행동(준)은 오늘부터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반대 ‘1만인 선언운동’과, ‘85,800인 서명운동’을 펴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개악입법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거리 캠페인에도 돌입할 것입니다. 이로써 비정규직 저임금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거듭 공론화 할 것입니다.

2009년 3월 11일(수)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국민행동(준)

참가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전국 실업극복단체연대, 다함께, 진보신당,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국여성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국대학생총연합, 카톨릭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네티즌카페“동행“, 촛불시민 연석회의

참관단체 : 민주언론 시민연합,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